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명곤

20대 정치참여, 희망의 싹을 본다

6월 2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20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세대라고 치부되어 왔다. 정치보다는 텔레비전의 오락물이나 스포츠, 명품 핸드백에 열광하는 세대라고 폄하되기 일쑤였다. 물론 아직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20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70년대나 80년대의 젊은이들을 휩쓸었던 변화와 개혁의 정치적 열풍이 다시 불기를 기대하기도 쉽지는 않다. 그러나 새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봄을 맞아 터져 나오기 시작한 20대들의 발언과 움직임은 앞으로 커다란 변화를 예감하게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에너지를 뿜어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유권자 운동'을 통해서 20대의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대학생연합, 시민주권 대학생모임, 대학생 YMCA, 원불교대학생연합 등은 가칭 '2010 지방선거 대학생유권자연대'를 결성하고 전국의 대학 단체 등에 공동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20대를 위한 정책을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캠퍼스에 초청해 청년정책 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20대의 정책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대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책을 수용한 정당이나 후보들과는 협약식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 각 대학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대학에 대한 정책을 내놓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를 통해 '학자금 이자조례 제정'이나 '시도립 기숙사 건립' 등의 정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연세대학교가 위치한 서대문구 구청장 후보와 서울시장에게 "20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할 예정이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임대료가 급등해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터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학생들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올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30% 선에 머물러왔던 20대의 투표율을 '88만원 세대'라는 호칭에 맞게 88%까지 높이겠다는 당찬 계획을 내걸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투표참여를 선언하는 30만 댓글 운동을 벌이고, '대학생 정치참여 권리선언 대회'도 열겠다는 것이다. 또 전입신고를 통해 선거구 내 대학생 유권자의 수를 높이고, 전국 주요 대학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이런 유권자 운동뿐만이 아니라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방선거에 직접 출사표를 낸 20대의 선언이 줄을 잇고 있어 4월 11일 현재까지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대 후보자는 26명이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20대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준비하고 있어 선거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 젊은이들은 정치에 실망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정치를 바라봤다. 그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취업난 속에서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방황하고 자포자기하며 지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지금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방황이나 자포자기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 스스로 고대를 퇴교한 김예슬양의 비통하면서도 울분과 절규에 가득 찬 대자보에 대학생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뒤따라서 자퇴 선언을 하는 학생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현재 20대들의 분위기가 어떠한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이제 암담한 현실에 대한 절규를 넘어서서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세대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선거는 그들의 권익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셈이다.

선거를 통해 정책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교육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회변혁이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지자체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바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법을 찾고자 뭉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뭉친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개혁에 나서고 자신들의 현실을 바꿔내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그 울림이 천둥이 되어 6월의 선거를 통해 꿈과 희망의 미래를 개척해 가길 희망한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여전한 지역간 학력격차 특단 대책 세워라

지역간 학력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4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시·도 간 최대 13점, 시·군·구 간에는 44점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6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학력 신장 프로젝트를 통한 수준별 맞춤식 교육과 부진학생 제로화 운동, 독서·논술·토론 교육 강화, 학생중심 교육환경 개선 등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혼연일체의 노력으로 '실력 광주'를 입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지역의 대학수능성적은 여전히 전국 중하위권을 맴돌았다. 전남지역 일반계고는 언어영역 1·2등급 비율이 7.4%로 16개 시도중 13위, 수리가와 나 영역은 5.2%와 5.9%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외국어 영역 역시 12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 기준(평균) 보다 0.4%-0.9%포인트 낮았다.

이처럼 전남의 학력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은 도서와 농어촌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도 학력 저하의 한 요인이다.

그러나 지역간, 도농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정원 배정을 기존 '학급수+학생수'기준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기준으로 변경해 올 한해 전남지역 교사가 대폭 감소하는 등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명문학교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지역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5·18 기념행사 '정치색' 변질은 안 된다

오는 5월18일이면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맞는다. 5·18 기념행사위원회는 이번 30주기 행사를 5월 항쟁의 의미와 상징성·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국적인 추모 행사 위주로 계획했다고 한다. 그동안 5·18 기념행사는 반민주·독재에 맞서 싸운 5월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데 주안점을 둬 왔다.

그 정신은 민주, 평화, 인권 등 지극히 숭고한 뜻을 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5·18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기념행사가 정략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계해 왔다.

그런데 이번 30주년 행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5·23)와 6·2지방선거 등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시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니 걱정이 앞선다. 다음달 15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열릴 '민주대성회'에는 각종 선언문과 시민·학생·각 단체의 입장 표명이 예고돼 있어 정치색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구청장 등 각 정당 후보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선거 유세장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물론 5·18은 민주, 평화, 인권이라는 그 정신에 따라 현 정부의 각종 정책과 비민주성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장(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5·18 기념행사가 마치 시국을 성토하는 '정치마당'으로 변질된다면 그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5·18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면서도 일과성의 특정지역 행사로 머물고 있고 전국화, 세계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의 대부분이 5·18 자체를 모르는 현실을 유념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념행사는 그 정신에 걸맞게 치르되, 이제 5·18을 전국민이 기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의료 칼럼

김수관

내 치아로 하는 임플란트

치아는 빠지거나 빼면 버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버릴 치아를 갖고 임플란트를 하는 시술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필자와 서울대병원 김영균 교수는 지난해 본인의 발치 된 치아를 가공해 이를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할 수 있는 골이식재인 '자가치아 이식재'를 만들어 임상에 적용하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

치주염이나 심한 충치로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하게 된다. 임플란트 시술은 잇몸뼈에 치아 뿌리의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기 때문에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으면 성공적 시술이 어렵다. 따라서 잇몸뼈 이식을 하고 몇 개월을 기다린 후 임플란트를 심기도 하며, 식립 후 재차 뼈이식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동안 사용하던 뼈이식 재료의 종류로 자가골(자신의 뼈), 동종골(가공된 타인의 뼈), 이종골(가공된 소, 돼지의 뼈) 및 합성골을 들 수가 있다. 이중 가장 이상적인 재료로 꼽히는 것이 자가골로 이는 동종골이나 이종골보다 유전적, 전염적 위험에서 안전하고 치유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뼈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잇몸뼈에 대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잇몸절개가 필요하고 불편감이 존재하며, 채취량 또한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필자와 김영균 교수는 임플란트 식립 전 대부분의 환자가 기능할 수 없는 치아를 뽑아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사람의 치아를 이용한 생체재료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해온 끝에 '자가치아 이식재' 개발에 성공했다.

자가치아 이식재는 치아에 함유된 유기질인 콜라젠을 보존시키는 방법으로 잇몸뼈와 동일한 골기질을 갖춰 기존의 골이식 재료보다 임플란트의 기능과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자가골 이식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전적, 전염적 위험이 없고 치유기간이 짧으며 타 골이식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뼈이식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의료진은 물론이고 환자의 골이식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전엔 버려졌던 발치된 치아를 가공해 다시 자신의 뼈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거부감이 없고, 기존의 골이식재보다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에서 자가치아 이식재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자가치아 이식재의 대상은 건전한 사랑니는 물론이고 충치치료, 신경치료된 치아 모두 가능하다. 환자가 자가치아 이식재를 만들기를 원하면 의료진은 발치한 치아를 생리 식염수에 냉장 보관 후 의뢰서를 작성한다. 약 일주일간 분쇄 및 처리 과정을 거쳐 분말형 또는 블록형으로 가공해 주사기에 보관한다.

보관이 가능한 기간은 약 5년까지로, 당장 임플란트 시술이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발치한 치아를 폐기하지 않고 골이식재로 만들어두면 향후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가치아 이식재에 대한 연구는 15년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약 30여편의 논문을 게재해 왔다. 2008년부터는 임상에 적용되어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자기 치아를 이용하여 거부감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환자들에게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힘입어 조선대치과병원은 최근 '가족치아 뼈은행'을 설립, 연구와 시술에 한층 전념하고 있다.

〈조선대치대 학장〉

기 고

이홍길

4월 혁명의 영욕을 돌아보며

4·19혁명 기념관의 봉안실에는 당시 산화한 열사들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교복도 단정한 영정 속의 열사들은 여전히 청청한 젊음인데, 기념관을 찾은 그날의 동지들은 고희를 바라보거나 넘겨 백발들이 성성하다. 4·19 50주년. 어언 반세기가 지나갔다.

영욕의 4월 혁명. 혁명 일주년을 넘기자마자 강보에 싸인 민주혁명은 5·16군사 쿠데타를 만나, 무질서의 근원으로 폄하되어, 옥외에서의 당당한 기념식도 치루지 못하고 의거로 강등되어 옥내에 유폐되어 의거로 숨죽여 지내야 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좋아졌네 좋아졌네 몰라보게 좋아졌네'의 새마을 노래로 암울한 시대에 살쪄가는 재미로들 살았다. 민주가 밥먹여 주나 하는 뻔뻔한 논리가 유신의 토양에서 살쪄갈 때, 10·26 김재규의 의거는 공화국을 살리는 강심제가 되었고, 숨어 숨어 농축된 4월 반독재 투쟁의 의기는 80년 광주 5 · 18 민중항쟁으로 되살아났다. 광주는 4·19민주혁명의 3대 성지의 하나였다. 민주를 보듬고 불퇴전의 용기로 싸우는, 온 산하를 수놓는 민중들이 있었기에 4월 혁명은 헌법 전문으로 각인 되어 민주 공화국의 구원한 버팀목이 되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의 4월 혁명 기념식은 옥내 옥외를 가리지 않는 국가적 행사가 되어 우리 모두가 4월 영령들을 위로할 수 있어 더 할 수 없이 다행이지만, 한반도와 우리를 둘러 싼 정치 사회적 기후는 불안하기만 하다.

전례 없는 남북의 경색. 천안함 사건. 양극화의 심화. 답답하기만 하다. 모두의 소망인 선진의 민주 통일국가를 향한 이구동성보다는 후안무치의 기득권 챙기기와 제 문패달기에 급급한 몰골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동족상잔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게 했던 좌·우익 논의가 난장의 상품처럼 우리들의 관심을 유발하면서 보수·진보의 화두가 새로 분식한 채 우리들 주변을 서성거린다.

1960년의 4월 혁명은 정파들의 권력 장악을 돕는 운동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혁명 당시의 서울 문리대 4·19 선언문은 "적색전제에의 과감한 투쟁에 대한 자부심과 똑같은 논리의 연역에서 민족주의를 위장한 백색전제에의 항의를 영광으로 자부한다"고 주장, 보편적 반독재를 분명히 하였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의 철칙으로 인민의 보편적 욕구의 증대에 따라 민주의 내용은 확대되거나 수정되어왔다. 볼셰비즘이 아닌 사회주의의 이상은 경제적 민주화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민주 공화국 안에서 진보·보수는 정치의 리듬을 형성하면서 훌륭하게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민주 통일국가가 되기 위해서, 7천만의 행복한 대동을 위해서 우리들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상잔하는 좌·우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익은 현상을 지키면서 변화를 민의에 맡기는 세력으로, 새로운 좌익은 변화를 통해서 공화국을 더욱 온전케 하려는 세력으로 이해할 때, 좌와 우는 서로의 위기와 약점을 보전해 주는 두 날개가 된다.

전투적 주도권 경쟁은 선의의 제3세력 뿐만 아니라 경쟁 당사자들의 삶마저도 파괴한다. 그러므로 민주세력으로 스스로를 가다듬는 것과 함께 외날개로 날더라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확보하려는 극좌·극우는 4월 혁명의 반독재 정신으로 순치시키거나 차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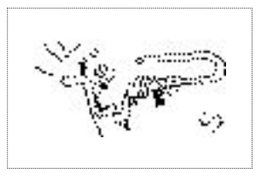
〈4·19민주혁명 제5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장〉

無 等 鼓

코너샷

"꽈광~"하는 폭격 소리에 정신없이 참호 속으로 뛰어들었다. 밤새 적진을 향해 총을 갈겨댔다. 이윽고 날이 밝아왔다. "사격 중지" 소리에 나와 보니 적은 보이지 않고 야자수 숲만 벌집이 돼 있었다. 옆집 형이 들려주던 베트남 전쟁 얘기다. 당연하다. 적을 쏘려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고개를 쳐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몸을 숨긴 채 총탄을 퍼붓는다면 총알만 낭비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총부리를 좌우 60도씩 꺾어 발사할 수 있는 굴절형 총기가 국내에서 개발됐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3번째다. 총이야 원래 '너 죽고 나 살자'며 쓰는 무기지만 이 것만큼 '나는 살아야겠다'는 목표에 충실한 총도 없다.



자기 몸을 은폐한 채 총의 허리를 꺾어 총구 쪽만 적 방향으로 내밀어 사격을 할 수 있으니 적탄에 맞을 위험이 없다. 병사는 '디카' 촬영이라도 하듯 LCD모니터나 접안 파인더를 통해 적을 보면서 방아쇠를 당긴다.

이 총은 2005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작회사인 코너샷홀딩스사(社)가 '코너샷'(Corner Shot)이라는 상품명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런 총을 만들려던 도전의 역사도 60년이 넘는다. 1940년대 초반부터 총신을 바나나처럼 구부려 발사 각도를 바꾸려는 시도들이 잇따랐다.

문제는 이런 '바나나 총'을 상대방도 사용했을 경우다. 쏘아 맞추기는커녕 서로 카메라 렌즈나 부수고 허송세월 할 가능성이 크다.

요즘, 민주당이 이런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류, 비주류로 갈려 서로 지역구를 다른 야당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특히 호남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 주류 측은 물론 누구도 자신의 몫을 내놓겠다는 인사가 없다고 한다. 내 것을 먼저 내놔야 영(令)이 서는 법인데…. 저러다 민심의 폭탄에 공멸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김주정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폐목 이용한 등산로 나무계단, 자연경관 해치고 불편

요즘 야산을 오르다 보면 폐목을 이용해 나무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폐목을 등산로에 설치한 목적은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폭우 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폐목으로 대부분의 등산로에 가로막 형태로 계단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나무계단은 자연경관을 해치고 노인의 경우 불편한 점이 더 많다. 각자의 체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르내려야만 힘이 덜 들고 하체에 무리도 덜할 텐데 이 나무계단을 이용하면 계단의 넓이와 높낮이에 맞춰서 걸어야 하기 때문에 보폭을 줄이거나 넓혀야 한다. 앞으로 등산로에 폐목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기태·광주시 광산구 율목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